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립금*

연구위원 홍원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연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립 상태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사용자가 추가적인 기여를 통해 부족액을 해결해야 한다. 사용자의 추가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부족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한다.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사용자도 이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 안정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퇴직 후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퇴직소득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정 준비 과정에서 목표 소득대체율¹⁾을 둘러싼 논쟁은 퇴직소득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²⁾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매년 기여액이 근로자의 퇴직제정에 적립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이 퇴직금 제도에 머물거나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였을 때에 비해 퇴직급여가 작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 정립을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해보고, 실질적인 소득 대체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적립금의 역할을 검토해본다. 그리고 퇴직 후 소득 안정을 위한 적립금 안정화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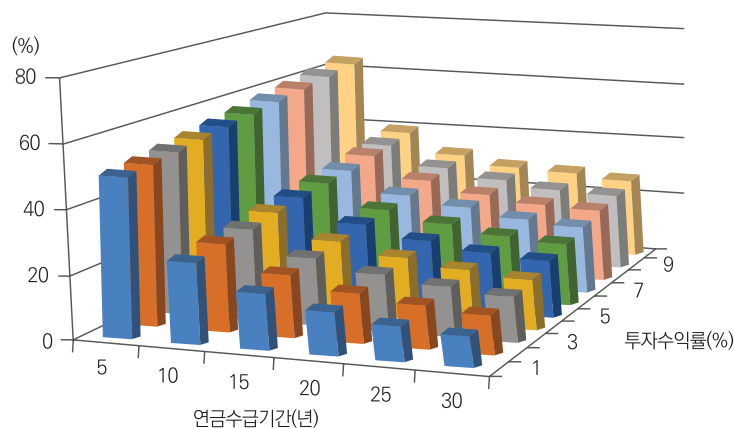
- 1)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 2) 2017년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8.4조원이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9조원(65.8%),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42.3조원(25.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적립금이 15.3조원(21.4%)이다.
- 3) 퇴직연금 기여율은 매년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비슷하지만, 소득 상한이 없어 소득이 높으면 기여액 자체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퇴직급여도 많아진다.

1. 퇴직연금의 기여율, 투자수익률과 소득대체율

일반적으로 적립형 연금을 설계할 때 목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여율을 결정한다.⁴⁾ 이때 적립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운용되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기여율도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기여율 그리고 수익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퇴직연금에는 기여액과 연금액 사이에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적립금이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기여금이 퇴직할 때까지 임금상승률⁵⁾로 재투자되면 DB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금액을 연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연금액과 퇴직 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그리고 퇴직후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0년간 연금을 받고,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동안 투자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연금액/최종급여)은 16.1%이다.⁶⁾ 투자수익률이 3%로 낮아지면, 소득대체율도 12.6%로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7%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20.0%로 높아진다(〈그림 1〉 참조). 근무연수가 예를 들어 29년, 28년, 25년으로 짧아진다면 그에 상응하여 소득대체율이 각각 15.6%, 15.0%, 13.4%로 낮아진다.⁷⁾

〈그림 1〉 DB형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주: 30년 근무 가정

4) 부과형의 경우에도 목표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근로세대에 부과될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5) 매년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이 같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같으면 DC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DB형 퇴직연금의 급여와 같아진다.

6) 월급여 30개월분의 퇴직일시금을 연금현가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30/186.3). 30년, 투자수익률 연 5%, 매월말 지급 시 연금현가는 186.3이고,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연금현가=[1-1/(1+i)^N]/i, i=투자수익률, N=지급기간

7) DC형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때 또는 DB형 퇴직연금이 미적립 상태에서 기업이 도산할 때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근무연수의 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연금수급기간, 연금수급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 이외에 근로기간의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DB형 퇴직급여 대비 DC형 퇴직급여의 비율은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높을수록 커지며,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

2.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급여는 퇴직 전까지는 금융회사에 적립된다. 적립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매년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⁸⁾ 근로자가 언제 퇴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일시금 만큼의 적립금이 금융회사의 퇴직계정에 쌓이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금 적립금이 목표 수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퇴직연금 적립액이 목표액에 미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연금 기여액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필요한 기여액을 납부했지만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이다

첫 번째의 경우를 보면 퇴직금과 비교해서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외부적립⁹⁾ 제도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적립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7년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98,457여개 기업 중 50%가 넘는 50,010개 기업이 부담금을 최소 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다.¹⁰⁾

두 번째 적립액의 미달 사유는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또는 예상 투자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미래의 비용을 추정하여 미리 적립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의 계산에 사용된 예상 투자수익률¹¹⁾보다 실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 미적립액이 커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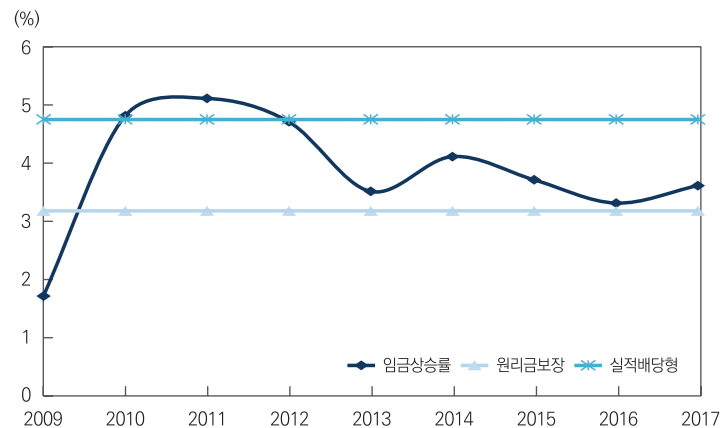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2월 개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은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이상을 말한다.

9) 2016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 대상인 사업장 118만개소 중에서 31.8만 개소가 도입하여 퇴직연금 도입률은 26.9%(2015년 25.6%)이다(통계청, 2017.12.22,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따라서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기업 외부에 적립하지 않고 있다.

10) 감사원, 2017, 감사보고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11)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그림 2〉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주: 금감원, 통계청, 임금상승률은 협약임금상승률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9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후)은 각각 3.18%, 4.74%였다(〈그림 2〉 참조). 이에 비해 최근 9년간 협약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7% 이후 3.3%~5.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다면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 차이만큼 추가 적립이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현재까지는 그 차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 우세한 듯하다. 그렇지만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낮을 때 추가적인 부담액도 적립금 규모에 상응하여 커질 것이다.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3년 안에 부족액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하여 적립금 부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DB형 퇴직연금 적립액이 필요 수준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미적립 금액을 채워야한다. 이에 반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퇴직연금 기여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는 ‘미적립’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항상 완전 적립상태이며, 그 적립금이 퇴직급여이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퇴직금 제도에서 받을 수 있었던 법정 퇴직금 금액보다 적어지며, 그 차액은 근로자 개인의 손실로 귀속된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퇴직금 제도에 그대로 머물거나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적인 손실을 본 셈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투자 수익률에 보다 관심을 갖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투자위험

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와 동일한 입장이다. 안정적 투자를 하며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그 잠재적 손실을 안고 갈 것인가 다소 투자위험을 부담하며 잠재적 적립금 부족을 줄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투자 손실로 인한 적립금의 감소, 즉 소득대체율의 감소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¹²⁾ 퇴직연금 도입 시에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중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 제도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 입장에서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두 제도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고, 2016년 12월말 기준 534만명의 가입자 중 42.9%의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였다.¹³⁾ 이들 중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 즉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임금상승률과 비교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에 비교할 때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가 평균적으로 매우 낮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수익률 공시에서 더 나아가 임금상승률 대비 투자수익률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개인의 임금상승률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중 임금상승률 대비 투자수익률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정보가 공시되어야 DC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2)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투자 상품의 도입 등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3) IRP 특례형 1.2%, 병행형 1.5% 포함(통계청, 2017.12,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